광주시

"市 소유다"

권은희 의원 "육군, 무각사 양도 때 시설·비품에 포함"

소유권 누구에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1981년 당시 광주에 있던 상무대 내 군종교 시설인 무각사를 방문, 자신의 이름을 새겨 기증한 범종의 소유권을 놓고 광주시와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 육군본부가 맞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육군본부 관계자들과 만나 '전두환 범종'의 광주시 반환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권 의원은 범종의 소유권이 광주시에 있다며 반환을 요구했지만 육군 측은 광주시에 소유권 입증 책임을 요구하며 반환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권 의원은 이 자리에서 "육군이 무각사를 광주시에게 양도할 때 시설·비품 현황에 '범종'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 "1996년 국방부와 광주시가 옛 상무대 공원부지 무상양여 계약서를 맺고 무각사의 토지와 건물 등을 광주시에 넘겼다"며 "2007년 9월에 장성 상무대로 넘어가기 전까지 소유주체는 광주시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두환 범종'은 지난 1994년 광주에 있던 상무대가 장성으로 옮겨간 이후에도 광주 5·18기념공원 내 사찰인 '무각사'에 그대로 보관돼 있었다. 하지만, 뒤늦게 범종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시민의 반발을 사자 2006년께 무각사에서 사라졌고 최근에야 장성 상무대 근무지원단 종교시설로 옮겨진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달 25일 소유권을 주장하며 '장성 상무대 내 무각사 범종 반환 요청' 공문을 국방부에 보냈다.

이에 대해 육군본부 관계자는 권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상무대 근무지원단은 장성 이전 당시 비용이 부족해 범종 및 석탑을 차후에 찾아가기로 했다"며 "광주시가 소유물반환청구를 하려면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범종이 무각사와 함께 광주시로 이전된 것이라면 종단 및 송광사와 함께 후속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며 반환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이번 협의에서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하자 다음주 중 장성 상무대를 방문해 '전두환 범종'의 설치 및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국방부와 법적, 정치적인 해결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입증해라"

국방부

"상무대 이전 당시 범종·석탑 차후에 찾아가기로"

광주시 처리 어떻게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 전시…교육자료 활용 검토

'전두환 범종' 반환 이후 광주시의 처리 방식에도 관심이 쏠린다.

5·18민중항쟁 학살 책임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발발 이듬해인 1981년 광주를 방문해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은 범종으로, 나름의 역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두환 범종 반환에 대비해 다양한 처리 방식을 고민중이다. 시는 일단 5월 관련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5·18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동구 금남로 옛 광주카톨릭센터 자리에 짓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내에 전두환 범종을 전시하겠다는 것이다.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은 내년 상반기 완공 목표로 총 264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건립중이며, 5·18 관련자료 3만5000여점과 유물 292점 등의 기록물이 보관·전시될 예정이다.

시는 2층 또는 3층 전시장에 전두환 범종을 전시해 역사 자료로 삼는 방안을 고민중이다.

하지만 전두환 범종의 무게가 2t이나 되는데다 높이도 3m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막대한 공간을 제공하면서까지 전시할 가치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전두환 범종을 녹여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관련, 이경률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은 "전두환 범종을 반환받은 이후 처리 과정에 대해 여러 방식을 검토중에 있다"면서 "5·18 관련 단체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존할지, 아니면 녹여 없앨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지법 정창호판사,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됐다

송상현 ICC 소장 이어 2년 연속 한국인 선출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인 정창호(48)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유엔재판관이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선출됐다.

정 재판관은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ICC 재판관 선출을 1차 투표에서 유효표 104표 중 3분의 2(70표)를 넘는 73표를 얻어 임기 9년의 재판관에 뽑혔다.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로, 지난1998년 체결된 로마조약에 따라 2002년 7월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공식 문을 열었으며 현재 122개국이 가입해 있다.

총 18명의 재판관을 두고 3년마다 6명을 번갈아 가며 선출하는 방식으로, 중대 범죄자를 국제사회가 단죄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이날 선거는 내년 3월 임기 만료되는 재판관 6명의 후임을 뽑기 위한 것으로, 정 재판관을 비롯해 마리아 나테르시아 구스마오 페레이라(동티모르), 크리스터 텔린(스웨덴), 마크 페렝 드 브리샴바우(프랑스), 베르트람 슈미트(독일) 등 17명이 입후보했다. 정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재판관은 1차 투표 외에 2·3·4차 등 후속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정창호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판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 사법협력관을 지냈고 지난 2010년 2월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2011년 8월부터 고용 휴직 상태에서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재판관을 맡고 있다.

정 재판관은 "법치, 인권 차원에서도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송상현 재판관에 이어 연속 ICC 재판관을 맡는 국가가 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연합뉴스

정보공개 파일 1시간내 열람은 무료

행자부 수수료 개편…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행정자치부는 9일 "정보공개청구 수수료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문서·도면·사진이나 전자파일을 열람할 때에는 1시간 이내는 수수료를 내지 않고, 1시간이 넘으면 초과 30분마다 1000원을 낸다.

현재는 열람 자료 1장당 20원을 부과한다. 또 5장당 100원씩 매긴 전자파일 제공 수수료는 1MB 이하는 무료로, 이보다 큰 용량은 1MB마다 100원이 적용된다.

사진 등 대용량 파일의 경우에도 10장마다 최대 100원 이내로 부과된다. 다만 정보공개를 위해 종이문서를 전자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 수수료의 2분의 1이 적용된다. 특수한 사본·출력물·복제물을 만드느라 외부에 의뢰해야 하는 경우 기관과 청구인의 협의를 거쳐 의뢰비용을 수수료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됐다. 행자부는 개정된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이 시행돼 국민의 부담이 줄고 알권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

KTX 타고 남도서 골프투어

道, 내년 3월 개통 앞두고 관광상품 개발·17개 대회 유치키로

함평 다이너스티 CC

전남도가 내년 KTX 호남고속철도 개통(3월 예상)에 맞춰 골프 관광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KTX와 광주·전남 골프장을 연계한 '남도골프 투어 상품'에 참여할 골프장을 현재 16개에서 내년에 23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남도골프 투어 상품을 이용한 골퍼는 1279팀에 5116명에 달한다.

도는 전국 규모 골프대회 17개를 내년에 유치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는 도지사기 대회 2개, 학생부 대회 2개, 프로 대회 7개, 아마추어 대회 2개 등 총 16개를 유치했다. 올해 선수·임원 7만6000명이 참가해 110억원의 경제효과를 본 것으로 전남도는 추산했다.

도는 이어 골프박람회 참가와 골프 인프라 홍보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또한 중국 관광객이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중국 언론인 골프 투어, 중국 동호인 골프대회 개최 등 중국인 유치를 위한 골프 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상하이 주재 전남사무소와 협력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골프 가격경쟁력에서 상하이(주말 기준 25만원) 보다 전남(10만~15만원) 골프장이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KTX 호남고속철도가 내년 초에 개통되면 골프 관광이 활성화할 것"이라며 "도내 골프 인프라를 활용해 국내·외 골프 관광상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지역은 회원제 8곳, 회원제+대중제 3곳, 대중제 24곳 등 총 35곳의 골프장이 운영 중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